

전남 지역 조류독감 급속 확산세 방역 전담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

전남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방역을 전담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특성상 한번 풀리면 피해규모가 상당한데도 방역 실무를 맡을 수의 인력이 부족해 동물병원 수의사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의 수의직 공무원의 총 정원은 78명인데 반해 현재 근무중인 인원은 16명 뿐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체 정원의 약 80%가 결원인 셈으로 목포, 곡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6개 시군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다.

지방 수의직 공무원은 보통 가축전염병예방,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평소에는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전염병 예방사업 등을 진행하지만 AI·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살처분, 방역대 설정 등의 방역 업무를 총괄한다.

일선에서 방역 최전선을 지켜야 하는 수의직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해 지자체들은 방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지식을 갖춰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빠른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도는 한차례 뽑던 수의직 공무원 임용을 올해 두 차례 진행했지만, 이조차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수의 7급' 임용을 통해 47명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6명만 지원했고 면접에 1명이 불참해 최종적으로 5명만 채용했다. 지자체의 총인 요구에 지난 9월 이례적으로 재공고를 내고 4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도 5명만 지원했다. 이조차도 면접에 2명만 참석해 최종 2명밖에 뽑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종합격률 2명도 모두 전남도 소속으로

22개 시·군 수의직 정원 78명인데 16명만 근무...6곳은 한 명도 없어 올 두차례 모집에 겨우 7명 총인 동물위생시험소도 정원 밀돌아 처우 낮고 업무 과중 시달려 동물병원 수의사까지 동원 방역

지원해, 인원 충원을 요청한 해남, 영암, 보성, 장흥 등 전남지역 18개 시·군에서는 수의직 7급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전남에서 처음으로 오리농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장흥에는 수의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장흥은 올해 3명의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두번 진행된 수의 7급 임용시험에서 장흥군에 지원한 수의사는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장흥군 가축방역 관계자는 "수의사들은 상황에 맞는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서 "현장에서 농가, 방역 직원들이 '일을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반발할 때도 전문 지식으로 현장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흥군도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명 뿐이다.

고흥군 가축방역 관계자는 "방역 현장에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것은,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수의직 공무원들이 있어야 방역이 끝나고 나서도 농장에 사후 관리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 전염병의 재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 가축 시료채취와 전염병 검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인력이 부

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직 정원은 82명이지만 현원은 65명 뿐이다. 지난 3년간(2019년 7월~2022년 11월)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직 의원면직자(자진 퇴직자)는 모두 17명으로 정원의 약 20%에 달한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의직들은 모두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도 백신접종, 예방 업무에 치이고, 전염병이 터지면 5분 대기조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의사들이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 전염병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부담스러워하고 월급이 충분하지 않는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지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남지역 수의직 공무원은 "6년제 수의대학 졸업하고 동물병원 개업하면, 수의직 공무원 1년 연봉을 한 달만에 벌 수 있는데 누가 여길 오겠는가"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수의직 공무원은 "전염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자녀들의 입학식과 졸업식 시즌과 겹쳐, 지금까지 한번도 자녀들의 졸업식에 가 보지 못했다"면서 "일에 비해 돈도 많이 못 벌고 개인 생활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는 부족한 수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수의사 군복무대체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하면 업무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원 자체가 극단적으로 적다"며 "다음달에 임기제 수의직 공무원을 뽑아 충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 전·현직 지자체장 잇단 기소

담양·영광군수, 전 순천시장 등 선거법 위반·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강종만 영광군수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허석 전 순천시장도 전담 기소됐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군수가 주민들에게 식사제공을 했다는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의금 기부와 변호사비 대납 관련 혐의는 인정했다.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 군수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군수가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했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인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가 2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위 교수를 직위해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리 혐의 조선대 무용과 교수 직위해제하라”

불공정해결대책위, 학교측에 촉구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A교수를 직위해제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대책위 차원에서 A교수를 직위해제해 줄 것을 조선대에 요구해 왔으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답만 내놨다”며 “정작 A교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조선대 측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대 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방만한 수업을 하는 A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조선대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 공정관 심사를 불 권리를 박탈당한 시간강사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며 “학과 내 입사·채용 비리, 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A교수는 수년 전부터 조선대 외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며 “대학 진학을 돕겠다”며 작품비 명목으로 제자들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올해 초 조선대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무용과의 영향력이 있는 B교수가 지원자 일부에게 ‘학대의 발전기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발전기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원자는 채용에서 최종 탈락했으며 A교수가 합격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 나주 ‘AI 초비상’

고흥 등 5개 농장 65만마리 살처분...방역당국 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지역 닭·오리 사육 농가로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장흥 농장(오리·16일)을 시작으로 나주 3개 농장(닭 1·오리 2개), 고흥 농장(오리) 등 불과 보름 만에 5개 농장에서 발생하면서 6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나주의 경우 최초 발병했던 공산면 오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농장에서 추가로 확진되는데, 첫 발병 농장 주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들이라는 점에서 방역 당국이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 등은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역인 전남에

서도 사육 농가(57농가 116만 1000마리)가 가장 많은 나주에서의 확산은 지역 가금 사육 농가 전체로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나주시 공산면 산란계·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중인 닭 5만5000마리와 오리 4만5000마리도 살처분했다.

이날까지 나주 공산면 3개 농장에서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장흥군 부산면 육용 오리농

장(16일), 나주 육용 오리농장(23일), 고흥 육용 오리농장(27일)에 이어 닭·오리농장(29일)까지 보름 만에 5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전국적으로도 총복(9개 농장), 경기(6개 농장)에 이어 확진 농장이 3번째로 많다.

방역당국은 나주 공산면 3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지만 발병 원인을 농장 간 전파가 아닌, 철새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역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감염의심 가금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9582 - 7400